

보도시점 2025. 3. 31.(월) 11:00
< 4.1.(화) 조간 >

배포 2025. 3. 31.(월)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한 산업기술보호법과 하위법령 금년 7월 22일 시행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일(금)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국은 ‘기술패권 전쟁’이라고 불릴만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와 기술보호 조치들을 대폭 강화중으로, 우리도 20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중요기술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여 왔다.

다만, 작년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23건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 : ('20)17 → ('21)22 → ('22)20 → ('23)23 → ('24)23건
- ('24)23건 : 반도체 6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4건, 자동차 2건 등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2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해 말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19개 조문 39개항을 개정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4.12.27)되어 지난 1월 공포('25.1.21)되었으며 금년 7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법은 기술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①기존에는 기업등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이 가능했으나,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하고,

②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하여 보유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③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정부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조사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산업부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1일 1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④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 및 정책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①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하고, ②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여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④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한편,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여, ①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들의 기술 수출승인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심의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수출심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②개별법에 따라 기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업기술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유사 행정 절차의 단축을 통해 기업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③보안 기술 지원에 국한된 정부의 예산 지원 범위를 보안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하여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이행을 위해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 기업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거나, 특허·발표 논문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진행시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②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이 보유기술을 등록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보유기관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하여 보유기술과 보유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③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미이행시 위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등을 고려하여 1일 1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요건을 규정하고,

* 미승인·미신고, 부정승인·부정신고 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합병

④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면제 또는 간소화 대상이 되는 수출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들의 수출심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 (수출유형) ① 이미 수출된 기술의 반복 수출, ② 자회사 또는 이미 수출한 기업에 수출, ③ 100% 지분 보유 외국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경우, ④ 인·허가 및 인증, 소송 대응을 위한 경우, ⑤ 대상기관의 요청으로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기술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심사 기간 단축을 유도하였다.

* 기술심사 상한을 45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45일로 연장

⑥아울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여, 국내외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지원 업무 등

□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시행(’25.7.22)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무역안보국 기술안보과	책임자	과 장	손용하 (044-203-4850)
		담당자	사무관	강정웅 (044-203-4854)

참고1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 주요 개정 내용

(‘24.12.7 본회의 의결, ‘25.1.21 공포, ‘25.7.22 시행)

□ 관리 강화

- ▲^①핵심기술보유확인제, ▲^②보유기관등록제, ▲^③불법수출 M&A 조치 강화(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④보호조치 미흡시 조치명령 신설, ▲^⑤이행강제금 신설, ▲^⑥비밀유지의무자 확대, ▲^⑦기술안보센터 지정,

- ① (현행)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정 → (개정) 국가가 직권으로 판정신청 통지 가능
- ②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 실시 등 체계적 관리
- ③ 불법수출·M&A의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 ④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을 하고, 조치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⑤ 불법M&A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일 1천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 ⑥ 핵심기술보유확인, 보유기관 등록, 조치명령 등 조문 신설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자 추가
- ⑦ 기업의 신청 심사건수는 증가(185건(‘20) → 468건(‘24))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상설 지원기관이 부재하여, 보호위 업무 지원 및 즉각적이고 심도있는 기술평가 기관 필요

□ 벌칙 강화

- ▲침해행위 확대(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브로커행위), 미신고 수출 등), ▲^①처벌대상 확대(목적범→고의범), ▲벌금 상향(15억원→65억원), ▲손해 배상한도 확대(3배→5배), ▲^②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① 목적범(해외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행위), 고의범(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행위)
- ② 핵심기술보유확인, 보유기관 등록, 조치명령 등 신설 제도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기업지원 등

- (기업지원 등) ▲^②수출절차의 면제 또는 간소화, ▲보안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③산업기술 확인 간주규정 신설, ▲^④산업기술 범위 현행화 등

- ①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수출의 경우 보호위 심의 또는 전문위의 검토를 면제 또는 간소화
- ② 각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확인서를 산업기술확인서로 간주하여 기업의 행정불편 경감
- ③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하여 현행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6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며, 기술 보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술심사 기한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설문조사 시행 주기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시 사전 통보를 신설하는 한편, 서류 보완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 범위 및 필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영 제7조의2).
- 나. 산업부장관이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경우, 통지의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 (영 제13조의2).
-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말소에 대한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 (영 제13조의3).
- 라.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수출에 대해 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영 제16조의2).
- 마.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대상기관에 통보 (영 제19조제3항및제4항).
- 바.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등을 고려하여, 1일 1천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영 제18조의8, 별표2).
- 사. 수출 승인 자료 제출 협조 거부, 보호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횟수별 부과기준 등을 정함 (영 별표1).

- 아. 침해신고를 받은 산업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신고한 내용이 침해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 (영 제20조제2항)
- 자.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함 (영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 차.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1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도록 함 (영 제22조제3항 및 제4항)
- 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 심사시, 서류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함 (영 제13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의3제3항, 제18조의4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강정웅 사무관 앞

- 이메일 : ii03274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기술안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지원 업무
2. 법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에 관한 지원 업무
3. 법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지원 업무
4. 법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법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에 관한 지원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대상기관”을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분야, 신청기간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기업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업등이 등록한 특허, 발표 논문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업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 신고가 있고 침해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업등이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할 때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단서의 기술심사는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5로 하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변경등록) ①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업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3.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해당 국가핵심기술 개발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②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3. 변경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변경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말소하려는 기업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3. 말소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말소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기술심사는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단서의 기술심사는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출절차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기술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다.

1. 이미 수출된 기술을 반복해서 수출하는 경우
2.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이거나 이미 기술을 수출한 동일 기업인 경우
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지분을 모두 보유한 외국 기업등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경우
4. 외국정부 및 기관 등의 인·허가 및 인증, 소송 대응 등을 위한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 승인 신청 또는 신고서 세부기술자료 또는 수출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기술의 범위 또는 잠재적인 수출상대방을 정하여 일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승인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2항에 따른 세부 수출유형, 면제 및 간소화 방식, 그 밖에 수출 절차의 일부 면제나 간소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8(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즉시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하거나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려”를 “하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정보수사기관의 장과”를 “상호”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실시”를 “1년마다 실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대상사업장·조사내용 등을 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의 ‘별표’를 ‘별표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7조의2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한다.</p> <p>② 제1항의 기술안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지원 업무 2. 법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에 관한 지원 업무 3. 법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지원 업무 4. 법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법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에 관한 지원 업무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p>	<p>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p>

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분야, 신청기간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기업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업등이 등록한 특허, 발표 논문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업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 신고가 있고 침해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업등이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할 때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 설>

<신 설>

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단서의 기술심사는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변경등록) ①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업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사업장
 3.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해당 국가핵심기술 개발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 ②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

<신 설>

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
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
자명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
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3. 변경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의 변경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
관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말소하려는 기업등은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
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
자명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
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제13조의3 (생략)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장

3. 말소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말소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제13조의5 (현행 제13조의3과 같음)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기술심사는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는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 수출금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 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단서의 기술심사는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조의2(수출절차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기술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다.

1. 이미 수출된 기술을 반복해서 수출하는 경우

제18조의3(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
 ·합병등을 승인받으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
 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
이거나 이미 기술을 수출한 동일
기업인 경우
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지분
을 모두 보유한 외국 기업등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경우
4. 외국정부 및 기관 등의 인·허가
및 인증, 소송 대응 등을 위한 경
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 승인
 신청 또는 신고시 세부기술자료 또
 는 수출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경
 우 기술의 범위 또는 잠재적인 수출
 상대방을 정하여 일정기간동안 포괄
 적으로 승인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2항에 따른 세부 수출유
 형, 면제 및 간소화 방식, 그 밖에 수
 출절차의 일부 면제나 간소화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3(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서류
3.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18조의4(해외인수·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 설>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4(해외인수·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의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8조의5(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를 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조의5(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 및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 설>

제18조의6(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① (생략)

②법 제11조의2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 및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은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6(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10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심의와 관련된 보유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보유기관의 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제18조의7(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개선권고의 이행)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하려면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개선권고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8(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9조(개선권고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

제20조(산업기술 침해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이 법 제14조 각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

조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보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즉시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산업기술 침해신고)① (현행과 같음)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신고한 내용이 법 제14조 각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p>시할 수 있다.</p> <p>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p> <p>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 이행현황</p> <p>3.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p> <p>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u>실시하거나</u>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와 같다.</u></p>	<p>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u>1년마다 실시하거나</u>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p> <p><u>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시기·대상사업장·조사내용 등을 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1과 같다.</u></p>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65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시행규칙 제1조의3, 별지 제1-1호서식).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시행규칙 제1조의4, 별지 제1-2호서식).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및 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5, 별지 제1-3호서식).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6, 별지 제1-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강정웅 사무관 앞

- 이메일 : ii03274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영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u>
<u><신 설></u>	<u>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u>
<u><신 설></u>	<u>제1조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u>
<u><신 설></u>	<u>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영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u>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술보유 사업장	(소재지)	
		(관리책임자명)	
		(보안책임자명)	
	기술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신청사유	[]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		
	[]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확보		
	[] 기타 사유		
신청사유 발생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에 대한 자료	수수료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정보	
	3.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해당 국가핵심기술 개발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없음

유의사항

- 신청사유 발생일은 표시한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판정일 또는 권리이전 발생일입니다.
-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관련 국가핵심기술 명칭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기술명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술보유 사업장	(소재지)
		(관리책임자명)
		(보안책임자명)
	기술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변경사유		
변경사유 발생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에 대한 자료	수수료 없음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정보	
	3. 변경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변경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유의사항

1. 변경사유는 등록신청 이후 등록신청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2.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관련 국가핵심기술 명칭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기술명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등록번호 제 호(년 월 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
4. 사업자등록번호 :
5. 기술분야 :
6. 등록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술보유 사업장	(소재지)	
		(관리책임자명)	
		(보안책임자명)	
	기술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신청사유	[]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의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않음		
신청사유	[] 국가핵심기술 이전 등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 권리가 없음		
신청사유 발생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에 대한 자료	수수료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정보	
	3. 말소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없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말소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유의사항

- 신청사유 발생일은 표시한 등록말소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의 발생일입니다.
-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관련 국가핵심기술 명칭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기술명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